



2026. 5.

국회에산정책처 | 재정소요점검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Scorekeeping of the Bills
Approved in 202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총괄 | 상지원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이진우 조세분석심의관
김신애 추계세제총괄과장
예승우 경제비용추계과장
김안나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 | 박선아(총괄, 지출)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수입) 추계세제분석관

추계 | 윤주철 장설희 최천규 박선아 김성원
문지은 최동완 남 희 장우윤 이제정
김우림 임슬기 정현수 전수연 이미연
전상욱 임지원 신홍철 강민지 김효경
박지원 이정훈 박성은 김주현 박정환
이유섭 신미정 추계세제분석관

지원 | 박혜림 행정실무관
배현진 자료분석연구원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6. 5.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5.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결산 분석, 재정·경제 전망 및 세제분석, 사업평가 등
국가 재정운용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 전문기관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기관의 직무에 따라 작성·발간된 것으로
국가 재정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재정·경제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의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재정소요를 점검한 결과를 표시한 것임
 2.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에서 양(+)의 값은 수입의 증가를 의미하고, 음(-)의 값은 수입의 감소를 의미함
 3.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에서 양(+)의 값은 지출의 증가를 의미하고, 음(-)의 값은 지출의 감소를 의미함
 4. 표의 합계 등은 단수 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보고서에 포함된 비용추계의 일부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의안 비용추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는 해당 법률안의 가결 이후 변화된 정보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

차 례

요 약 / 1

I. 서 론 / 1

-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1
-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4

II. 2025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 7

- 1. 개요 7
- 2.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현황 10
-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현황 13
- 4. 연도별 가결 법률 및 재정수반법률 현황 19

III. 2025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21

- 1. 개요 21
- 2. 2025년 개정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24
-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26
-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49

IV. 2025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59

- 1. 개요 59
- 2.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63
-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66
-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74

V. 결 론 / 81

표 차례

[표 1] 2025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7
[표 2] 2025년 제·개정 재정수반요인 현황	8
[표 3] 2025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11
[표 4] 2025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위원회별	14
[표 5] 2025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15
[표 6]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위원회별	17
[표 7]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18
[표 8] 2025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22
[표 9] 2025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23
[표 10] 2025년 개정 수입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4
[표 11] 2025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법률별	27
[표 12] 2025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	28
[표 13] 2025년 개정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0
[표 14] 2025년 개정 「법인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1
[표 15]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2
[표 16] 2025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5
[표 17] 2025년 개정 「교육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6
[표 18] 2025년 개정 「담배사업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8
[표 19] 2025년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38
[표 20] 2025년 개정 「개별소비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9
[표 21] 2025년 개정 「관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0
[표 22] 2025년 개정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42
[표 23] 2025년 개정 「지방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4
[표 24] 2025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47
[표 25] 2025년 개정 조세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48
[표 26] 2025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49
[표 27] 2025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51

[표 28] 2025년 개정 과세대상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2
[표 29] 2025년 개정 과세표준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3
[표 30] 2025년 개정 세율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4
[표 31] 2025년 개정 세액공제·감면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6
[표 32] 2025년 개정 기타 조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7
[표 33] 2025년 개정 조세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8
[표 34]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61
[표 35]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62
[표 36]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소요점검 결과	63
[표 37]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64
[표 38]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65
[표 3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소요점검 결과	66
[표 40]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분야별	67
[표 41]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68
[표 42] 2025년 개정 사회복지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70
[표 43] 2025년 개정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71
[표 44] 2025년 제·개정 농림수산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72
[표 45] 2025년 제·개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	73
[표 46] 2025년 제·개정 보건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74
[표 47]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성격별	75
[표 48]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성격별	76
[표 49] 2025년 개정 의무지출 재정수반요인의 점검 결과	77
[표 50] 2025년 제·개정 재량지출 재정수반요인의 점검 결과	80
[표 51]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연평균 재정소요 ...	82

그림 차례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4
[그림 2] 2025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9
[그림 3] 2025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12
[그림 4] 연도별 가결 법률 및 재정수반법률 현황	19

요 약

- (재정소요점검 개요)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¹⁾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의미
 - 이때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은 전년 대비 변화(순액법)가 아닌 기준선 대비 변화(누적법)로 추계
 -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²⁾과 재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재정정보를 제공
 - 의안비용추계는 의안 발의단계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하는 ‘비용’(수입 순감 또는 지출 순증)을 추계
 -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변화’(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를 추계하므로,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을 포함
- (재정소요점검 필요성)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에 대한 분석과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의 수정 내용 및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추가재정소요의 점검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 (가결 법률 기준 재정소요정보 제공)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재정정보를 제공

1) 기준선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전망한 것임

2) 법률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정수반요인’이라고 함

- 의안비용추계는 법률안 입안단계에서 의안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을 추계하는 것으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반요인이 수정되거나 법률안이 가결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반요인의 수정과 추계의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예산안의 확정 등 재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재추계 필요
-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³⁾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어 비용추계서 첨부부가 생략된 위원회대안에 대하여 최종 가결안의 재정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
- 국회에서 가결된 정부 제출 법률안⁴⁾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제공 가능
- (중기재정영향 분석) 가결 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년도에 국한해 분석하지 않고,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므로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한 수단

□ (점검 대상)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562건⁵⁾ 중 재정수반법률은 207건이며, 이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118건의 법률에 대하여 재정소요점검 시행

-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에 포함된 재정수반요인 771개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총 322개
 - 점검대상 수입법률은 54건으로 278개 재정수반요인이고, 이 중 추계가 가능한 법률은 18건, 152개 요인
 - 점검대상 지출법률은 176건으로 493개 재정수반요인이고, 이 중 추계가 가능한 법률은 101건, 170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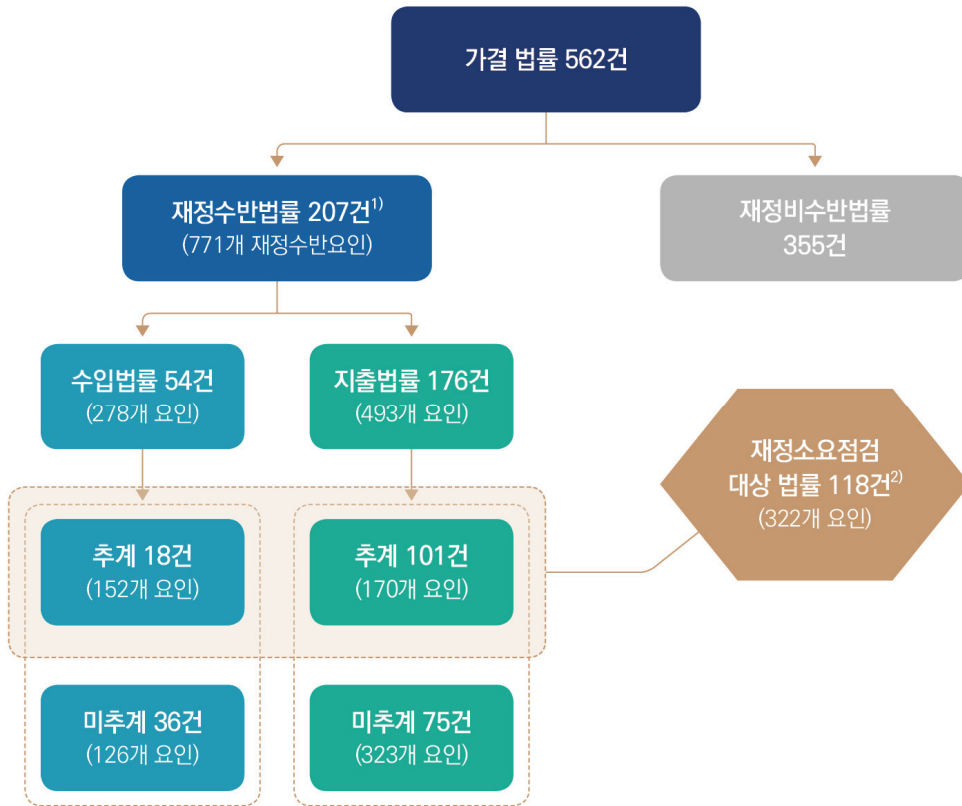
3)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5)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재의 결과 부결된 1건의 법률안 제외

- 재정수반법률·요인 중 추계를 위한 자료의 부재, 하위법령에의 위임 등에 따른 구체적 시행 계획의 미비 등으로 현 시점에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추계 재정수반법률·요인으로 분류

[2025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3건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점검 결과)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와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재정소요 변화는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와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로 구분됨
 -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는 재정수반요인 중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을 제외한 재정수반요인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의미
 -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효과는 재정수반요인 중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의미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편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 2,083억원의 수입 증가와 연평균 7,67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수입) 국민연금 보험료율·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 등 재정수반요인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6조 2,083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지출)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 재정수반요인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67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3조 446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69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수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조 446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지출)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 등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69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연평균 재정소요]

구분	수입		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3조 1,637억원 증가		1조 7,366억원 증가
제도개편 효과	16조 2,083억원 증가		7,675억원 증가
	조세수입	5조 7,040억원 증가	
	조세외수입	10조 5,043억원 증가 ¹⁾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13조 446억원 감소		9,690억원 증가

주: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효과(연평균 10조 4,785억원) 포함

1.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재정변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예산 편성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적용기한 연장 등을 제외한 제도개편의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16조 2,083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13조 446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수입법률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에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수입 감소 예상

[2025년 개정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총액기준]

(단위: 개, 억원)

법률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조세 수입	국세 수입	법인세법	1	184,820	36,964
		교육세법	1	65,513	13,103
		담배사업법	1	61,878	12,37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1,685	337
		조세특례제한법	79	-637,313	-127,463
		소득세법	6	-8,247	-1,649
		개별소비세법	1	-4,297	-859
		관세법	5	-1,933	-387
		기타 ¹⁾	6	1,288	258
	지방세 수입	지방세법	5	14,443	2,889
		지방세특례제한법	44	-44,867	-8,973
	소계		150	-367,031	-73,406
조세외 수입	국민연금법		1	523,927	104,78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1,288	258
	소계		2	525,215	105,043
합 계			152	158,184	31,637

주: 1) 조세수입 기타에는 연평균 200억원 이하의 4개 수입법률을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52개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수반요인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율 및 요율 등 관련 개정으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감면 관련 개정으로는 수입의 감소 예상

[2025년 개정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개, 억원)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조세 수입	과세대상	17 (12)	18,314 (72,803)	3,663 (14,561)
	과세표준	8 (4)	-167,371 (-11,846)	-33,474 (-2,369)
	세율	7 (6)	182,706 (258,160)	36,541 (51,632)
	세액공제·감면	112 (32)	-403,245 (-36,483)	-80,649 (-7,297)
	기타	6	2,565	513
	소계	150 (60)	-367,031 (285,199)	-73,406 (57,040)
조세외 수입	적용대상	1	1,288	258
	요율	1	523,927	104,785
	소계	2	525,215	105,043
합 계		152 (62)	158,184 (810,414)	31,637 (162,083)

주: 1. ()는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가결된 수입법률의 경우, 세율 등의 인상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결혼·출산·자녀양육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2025년 개정 수입법률의 주요특징]

(단위: 억원)

특징	주요내용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수입기반 확충,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523,927	104,785
	법인세율 인상	184,820	36,964
	교육세율 인상	65,513	13,103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18,482	3,696
	소계	792,742	158,548
결혼·출산·자녀양육 지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자녀 수에 따른 공제한도 확대	-153,137	-30,627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2,979	-596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 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709	-342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1,372	-274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170	-34
	소계	-159,367	-31,87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6,397	-15,279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919	-18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준 확대	-252	-5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170	-3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106	-21
	소계	-77,845	-15,56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7,67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69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 순으로 지출 증가 예상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단위: 개, 억원)

지출분야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일반·지방행정	15	1,478	296
공공질서 및 안전	10	955	191
통일·외교	1	2	0
국방	1	5	1
교육	5	52	10
문화 및 관광	11	724	145
환경	6	1,165	233
사회복지	21 (20)	58,878 (10,427)	11,776 (2,085)
보건	20	3,664	733
농림수산	10	4,654	93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	3,802	760
교통 및 물류	17	2,929	586
통신	1	1,000	200
국토 및 지역개발	15	7,217	1,443
과학기술	9	302	60
합 계	170 (169)	86,828 (38,377)	17,366 (7,675)

주: 1. ()는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성격별로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의무지출은 연평균 1,286억원, 재량지출은 연평균 1조 6,080억원 증가 예상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성격별]

(단위: 개, 억원)

지출성격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의무지출	2	6,430	1,286
재량지출	168 (167)	80,398 (31,947)	16,080 (6,389)
합 계	170 (169)	86,828 (38,377)	17,366 (7,675)

주: 1. ()는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특징을 보임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주요특징]

(단위: 억원)

특징	주요내용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2,610	52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5,445	1,089
	소계	8,055	1,611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지역의사 양성 지원 등	2,107	421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지원	319	64
	소계	2,425	485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국토위성 신규 도입 등	3,774	75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등	2,970	594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및 지원	1,000	200
	소계	7,744	1,549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 연장	48,451	9,6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소요점검은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법의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정소요 발생의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에 따른 추계상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과 단가가 확정되어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지출 법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과 세율이 명문화된 세입법률의 경우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실시 가능
 -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구체적 시행 계획의 미비, 추계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점검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예산 편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 서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 (정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 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¹⁾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²⁾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³⁾을 의미
 - 이때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은 전년 대비 변화(순액법)가 아닌 기준선 대비 변화(누적법)로 추계함
 - 입법의 재정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안 발의단계에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의안비용추계⁴⁾와 유사하나,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⁵⁾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한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수반요인을 ‘재추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1) 우리나라의 재정소요점검과 유사한 제도로 미국의 스코어키퍼링(Scorekeeping) 제도가 있음(미국의 스코어키퍼링 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Box 1](p.6.) 참고).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과 재정수반법률안 심사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안의 소요 비용이 지출 한도를 준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추계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은 미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안 가결 후 재정변화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재정소요점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2) 기준선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전망한 것임

3) 해당 사업이나 수입의 전체 금액(총 재정소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제·개정에 따라 추가로 변동이 발생하는 재정소요의 증감을 의미

4)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법률안이 아닌 ‘법률’로 표현. 본 보고서에서는 ‘법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되, 경우에 따라 법률안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

- (의안비용추계) 의안 발의단계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하는 비용, 즉 ‘수입 순감 또는 지출 순증’이 추계 대상⁶⁾
- (재정소요점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 등 재정환경 변화⁷⁾를 고려하여 ‘수입 또는 지출의 순증 및 순감’⁸⁾을 추계

□ (대상) 재정소요점검의 대상은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이며, 분석 단위는 재정수반법률에 포함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임

- ‘재정수반법률’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야기하는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한 법률로서, 재정수반법률은 2개 이상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음
 - 제·개정된 재정수반법률은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거나, 여러 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인별로 추계 결과를 점검
- 재정소요점검 대상 재정수반법률의 범위에는 국회 의안심사과정을 거쳐 가결된 의원발의안·위원회대안·정부제출안⁹⁾ 등을 모두 포함
 - 법률안이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긴급한 사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위원회대안 등도 사후 재정소요점검의 대상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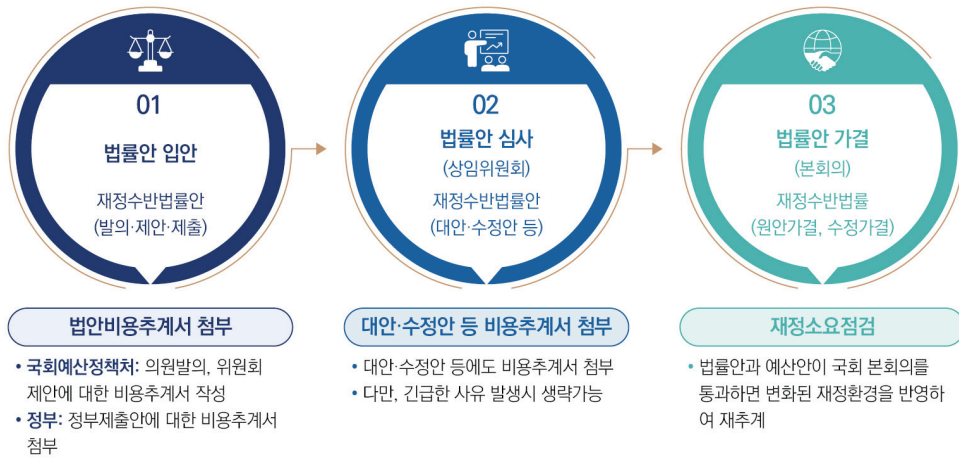
6)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재정환경 변화’는 의안발의 단계의 비용추계 시점과 달라진 거시경제지표 변화(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와 확정예산 등을 반영함
 8) 즉, 재정소요점검은 의안비용추계와 달리 수입 순증과 지출 순감에 대해서도 모두 각각 추계함
 9) 의안비용추계는 의원발의안과 위원회대안 등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제출안은 정부가 관련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안 가결 후 이뤄지는 재정소요점검은 의원발의안, 위원회대안 등은 물론 정부제출안으로 가결된 모든 재정수반 법률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함
 10) 다만, 모든 재정수반법률의 예상 소요액을 추계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제·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재정사업 등이 구체화 되어야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의 속성(수입법률·지출법률)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재정주체별(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제시하며, 수입법률은 수입법률별, 수입유형별로, 지출법률은 지출분야별, 지출성격별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추가 제시
 - 수입법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외수입 관련 수입법률 등으로 구분
 -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은 조세수입의 경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감면, 기타 유형으로, 조세외수입의 경우 적용대상, 요율, 감면, 기타 유형으로 구분
 - 지출분야는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로 구분
 - 지출성격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재정소요 변화는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와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로 구분됨
 -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는 재정수반요인 중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을 제외한 재정수반요인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의미
 -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효과는 재정수반요인 중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의미

□ (시점)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법률이 가결된 이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시점에 실시

-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반요인이 수정되거나 법률안이 가결된 이후 법률안 발의 단계에 구체화되지 않았던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
- 법률안 가결 이후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 제·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의 확정예산 등을 반영하여 재추계
 - 특히,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영향을 재추계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가. 가결 법률의 추가재정소요 정보 제공

-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 의안비용추계는 법률안 입안단계에서 의안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을 추계하는 것으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반요인이 수정되거나 법률안이 가결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수반요인의 수정과 추계의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예산안의 확정 등 재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재추계 필요
 - 법률안 입안단계에서 개별 법률안별로 추계를 실시하는 의안비용추계만으로는 한 해 동안 가결된 법률 전체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총괄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가결 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필요

-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¹¹⁾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어 비용추계서 첨부부가 생략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최종 가결안의 재정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
- 국회에서 가결된 정부 제출 법률안¹²⁾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제공 가능

나.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 분석

- 재정소요점검은 가결 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는 법령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무지출과 국회 예산과정을 통해 통제되는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재정영향을 점검할 필요
 -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년도에 국한해 분석하지 않고,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므로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한 수단
 -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법률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추계액으로 재정수반법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차년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에 바로 반영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예산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1)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2)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Box1] 미국 연방예산과정에서 스코어키퍼(Scorekeeping) 제도와 의회예산처의 역할

- 미국 연방예산과정에서 스코어키퍼(Scorekeeping)은 재정수반법률안의 예산결의안 한도 및 PAYGO 준칙¹³⁾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입법에 따른 재정 영향을 점검하는 장치
 -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과정은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연방 수입, 총지출 수준, 지출의 기능별 배분 등을 규정한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채택하고,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할당하면, 각 위원회가 할당된 지출 한도 범위 내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의회예산처(Congress of Budget Office, CBO)의 추계 결과에 기반하여 지출법안의 할당액 초과 여부를 실시간 검토하며, 예산결의안의 한도 수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연방의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상 이의제기(Points of order)를 통해 이를 조율할 수 있음
 - CBO는 매 회기 종료 후 제정 법률의 누적 재정 영향을 분석한 ‘연간 종합 보고서’¹⁴⁾를 발간하여, 당해 연도 입법 결과가 국가 재정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적으로 집계
- 스코어키퍼 제도는 의회의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재정전망의 정밀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
 - (입법 의사결정 지원) 법안의 재정 영향을 집계하여 공개함으로써 의회의 재정적 책임성을 뒷받침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예산 심의와 입법권 행사를 보조
 - (재정 전망의 기준선(Baseline) 업데이트) 정기 보고서로 집계된 입법 효과는 차년도 재정총량 기준선 재설정의 근거로 활용되어, 연방예산편성 과정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13) PAYGO(Pay-As-You-Go)는 2010년 법률로 제정(「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2010.2.12. 제정)되어, 의무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입을 감소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경우 세입증가나 다른 지출을 감소하도록 하여 재정수지에 영향을 상쇄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삭감하여 재정수지에 영향이 없도록 한 제도

14) 미국 의회예산처(CBO), 「제119대 의회 제1회기 중 제정된 의무지출 및 세입 관련 법률 (Legislation Enacted in the First Session of the 119th Congress That Affects Mandatory Spending or Revenues)」, 2026.3.19.

II. 2025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1. 개요

- 2025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 562건¹⁵⁾ 중 재정수반법률은 207건¹⁶⁾
 - (수입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54건
 - 수입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207건 중 54건으로 26.1%를 차지
 - (지출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176건
 - 지출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207건 중 176건으로 85.0%를 차지
- 재정수반법률 207건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수입법률 18건, 지출법률 101건 등 총 118건의 법률에 대하여 재정소요점검 시행

[표 1] 2025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단위: 건, %)

재정수반법률	수입법률	지출법률	합계
법률 (비중) ¹⁾	54 (26.1)	176 (85.0)	207 ²⁾ (100.0)
추계	18	101	118 ³⁾
미추계	36	75	89 ⁴⁾

주: 1)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비중의 합은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로 인해 100.0%를 초과하나 합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100.0%로 표시

2) 수입과 지출의 변동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3건 포함

3) 수입과 지출의 변동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건 포함

4) 수입과 지출의 변동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2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5)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재의 결과 부결된 1건의 법률안 제외

16)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3건 포함

- 2025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에는 771개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118건의 재정수반법률의 322개 재정수반요인을 추계
- 2025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771개로 207건의 가결 법률 1건당 평균 3.7개 요인을 포함
 - (수입법률) 2025년 가결된 수입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278개로 54건의 수입법률 1건당 평균 5.1개
 - (지출법률) 2025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493개로 176건의 지출법률 1건당 평균 2.8개
 - 수입법률의 경우 법률 1건당 재정수반요인이 지출법률보다 더 많은데, 이는 수입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법에 다수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기 때문¹⁷⁾
 - 추계한 재정수반요인은 322개로 수입법률의 경우 152개, 지출법률의 경우는 170개

[표 2] 2025년 제·개정 재정수반요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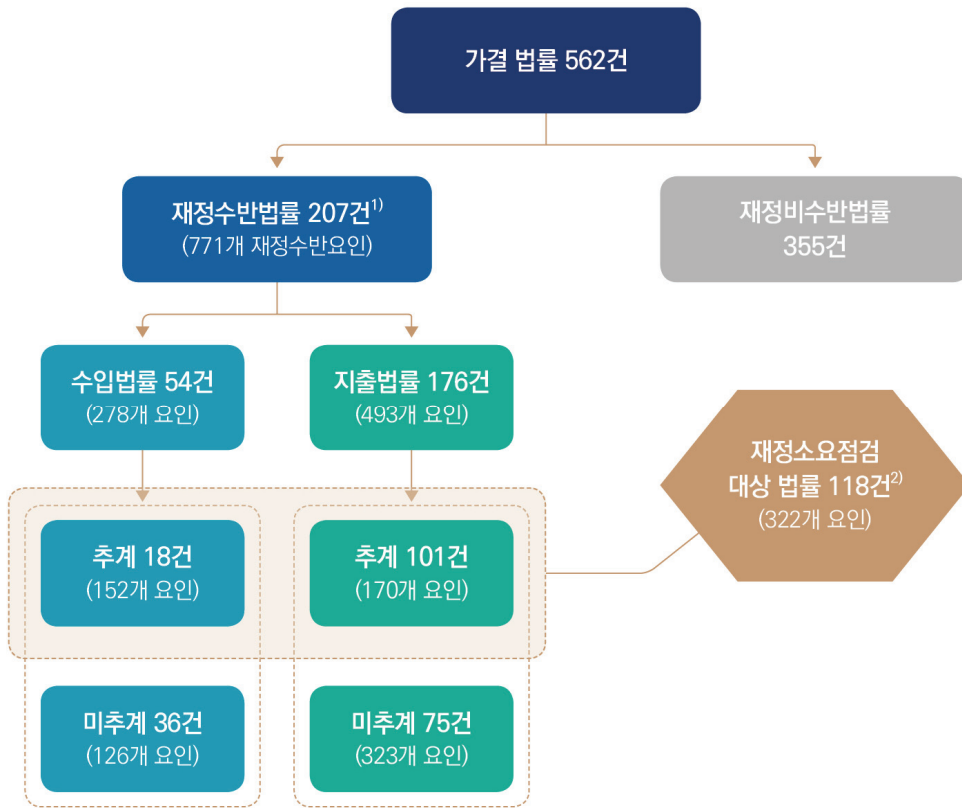
(단위: 개, %)

재정수반요인	수입	지출	합계
요인 (비중)	278 (36.1)	493 (63.9)	771 (100.0)
추계	152	170	322
미추계	126	323	4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7) 일례로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2025. 12. 2., 의결)의 경우 100개, 「지방세특례제한법」(행정안전위원회, 2025. 12. 30., 의결)의 경우 52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

[그림 2] 2025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3건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현황

□ 2025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위원회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반법률 207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7건, 국토교통위원회 30건, 보건복지위원회 29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건 순
 - 가결 법률 562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9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건, 국토교통위원회 5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9건 순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322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1개, 행정안전위원회 68개, 보건복지위원회 31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개, 국토교통위원회 24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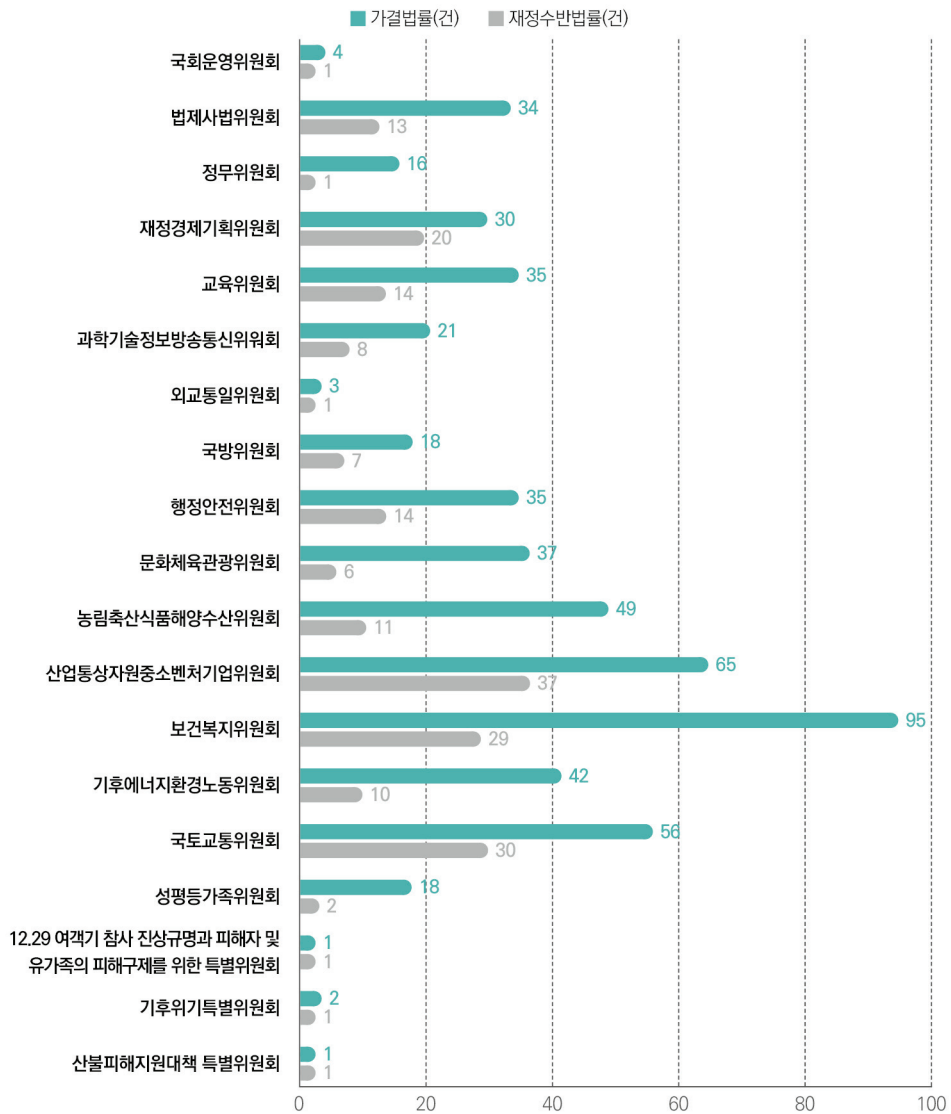
[표 3] 2025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개)

위원회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추계가능	전체	추계가능
국회운영위원회	4	1	1	1	1
법제사법위원회	34	13	6	14	6
정무위원회	16	1	1	1	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0	20	14	167	101
교육위원회	35	14	3	60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	8	6	35	13
외교통일위원회	3	1	1	1	1
국방위원회	18	7	1	12	1
행정안전위원회	35	14	10	95	6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	6	6	10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9	11	6	29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	37	16	141	28
보건복지위원회	95	29	22	70	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2	10	6	12	6
국토교통위원회	56	30	14	78	24
정보위원회	-	-	-	-	-
성평등가족위원회	18	2	2	3	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1	1	1	14	8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	1	1	1	1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1	1	1	27	2
합 계	562	207	118	771	3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3] 2025년 제·개정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현황

가. 수입법률

- 2025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수입법률은 54건으로 278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추계가 가능한 18건 법률, 152개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재정소요점검을 시행
- (위원회별) 2025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위원회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수입법률 18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4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보건복지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1건 순
 - 수입법률 54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건, 보건복지위원회 8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건, 국토교통위원회 6건 순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152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1개, 행정안전위원회 49개, 보건복지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각 1개 순

[표 4] 2025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개)

위원회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추계가능	전체	추계가능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	-	-	-
정무위원회	-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	14	167	101
교육위원회	2	0	8	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	0	5	0
외교통일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	-	-	-
행정안전위원회	2	2	65	4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1	1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0	2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	0	11	0
보건복지위원회	8	1	8	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	0	3	0
국토교통위원회	6	0	8	0
정보위원회	-	-	-	-
성평등가족위원회	-	-	-	-
합 계	54	18	278	1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2025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수입법률 18건¹⁸⁾을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16건(88.9%), 지방자치단체가 6건(33.3%)을 차지
 - 수입법률 54건을 재정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51건(94.4%), 지방자치단체가 7건(13.0%)을 차지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152개¹⁹⁾는 국가가 103개(67.8%), 지방자치단체가 65개(42.8%)

[표 5] 2025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단위: 건, 개, %)

재정주체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¹⁾	추계가능 ¹⁾	전체 ²⁾	추계가능 ²⁾
국가 (구성비)	51 (94.4)	16 (88.9)	212 (76.3)	103 (67.8)
지방자치단체 (구성비)	7 (13.0)	6 (33.3)	82 (29.5)	65 (42.8)
합 계	54 (100.0) ³⁾	18 (100.0) ³⁾	278 (100.0) ³⁾	152 (100.0) ³⁾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4건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재정수반요인 16개 포함

3) 비중의 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로 인해 100.0%를 초과하나 합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100.0%로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4건 포함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재정수반요인 16개 포함

나. 지출법률

- 2025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지출법률은 176건으로 493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추계가 가능한 101건 법률, 170개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재정소요점검을 시행
- (위원회별) 2025년 가결된 지출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위원회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지출법률 101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2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건, 국토교통위원회 14건 순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170개는 보건복지위원회 30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개, 국토교통위원회 24개, 행정안전위원회 19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3개 순

[표 6]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개)

위원회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추계가능	전체	추계가능
국회운영위원회	1	1	1	1
법제사법위원회	13	6	14	6
정무위원회	1	1	1	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	-
교육위원회	14	3	52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	6	30	13
외교통일위원회	1	1	1	1
국방위원회	7	1	12	1
행정안전위원회	12	8	30	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5	9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	6	27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6	16	130	28
보건복지위원회	27	22	62	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8	6	9	6
국토교통위원회	28	14	70	24
정보위원회	-	-	-	-
성평등가족위원회	2	2	3	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1	1	14	8
기후위기특별위원회	1	1	1	1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1	1	27	2
합 계	176	101	493	1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2025년 가결된 지출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지출법률 101건²⁰⁾을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99건(98.0%), 지방자치단체가 9건(8.9%)을 차지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170개²¹⁾는 국가가 168개(98.8%), 지방자치단체가 10개(5.9%)

[표 기]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단위: 건, 개, %)

재정주체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¹⁾	추계가능 ²⁾	전체 ³⁾	추계가능 ⁴⁾
국가 (구성비)	167 (94.9)	99 (98.0)	464 (94.1)	168 (98.8)
지방자치단체 (구성비)	41 (23.3)	9 (8.9)	81 (16.4)	10 (5.9)
합 계	176 (100.0) ⁵⁾	101 (100.0) ⁵⁾	493 (100.0) ⁵⁾	170 (100.0) ⁵⁾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32건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추계가능 법률 7건 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재정수반요인 52개 포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8개 포함

5) 비중의 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로 인해 100.0%를 초과하나 합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100.0%로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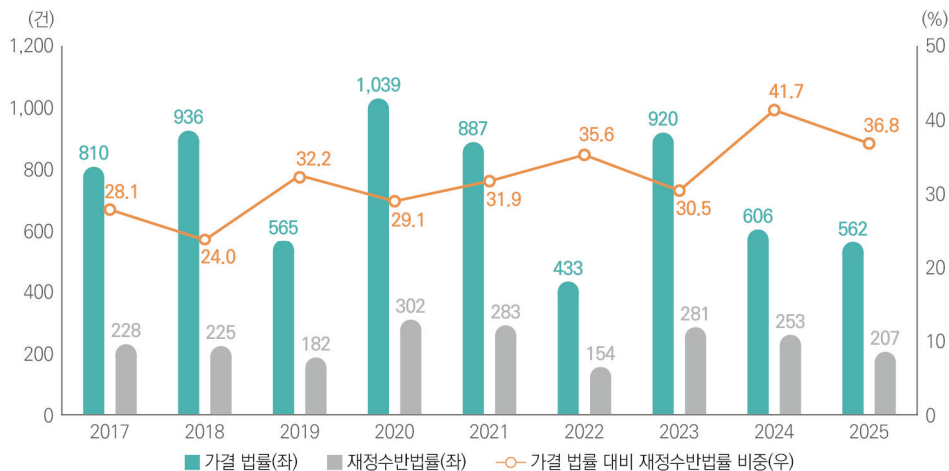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추계가능 법률 7건 포함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8개 포함

4. 연도별 가결 법률 및 재정수반법률 현황

- NABO는 2017년 가결된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이래 매년 재정소요점검을 수행 중
- 2017~2025년 기간 중 가결 법률은 연평균 751건, 재정수반법률은 연평균 235건이며, 가결 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 비중의 평균은 32.2% 수준
 - 2025년의 경우 가결 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의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41.7% → 36.8%)하였으나, 최근 9개년 평균치(32.2%)를 상회하고 있어 입법 활동의 재정 영향력은 중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그림 4] 연도별 가결 법률 및 재정수반법률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2025년 가결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 2025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수입법률은 54건(재정수반요인은 278개)으로 이 중 추계가 가능한 법률 18건(재정수반요인 152개)에 대해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²²⁾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동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른 수입 변동 규모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포함
 -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 2,083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이하에서는 추계가 가능한 18건 법률의 15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재정주체별로 구분하여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서술
- (위원회별) 추계가 가능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각각 1건 존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수입법률의 101개 재정수반요인(법인세율 인상, 교육세율 인상,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조 7,321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22) 이하 연평균 값은 법률 제·개정에 따라 2026~2030년까지 예상되는 수입 변동의 총액을 5년으로 나눈 값으로, 예를 들어, 법률이 2027년 이후 시행되거나 법률의 효력이 2029년 이전에 종료되어 수입 변동이 1~4년간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수입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조 4,165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수입법률의 49개 재정수반요인(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085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수입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875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수입법률 1건의 재정수반요인(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0조 4,785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수입법률 1건의 재정수반요인(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도입)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58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표 8] 2025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단위: 개, 억원)

위원회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1 (42)	-336,607 (270,827)	-67,321 (54,165)
행정안전위원회	49 (18)	-30,424 (14,372)	-6,085 (2,875)
보건복지위원회	1	523,927	104,78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1,288	258
합 계	152 (62)	158,184 (810,414)	31,637 (162,083)

주: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5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가 재정주체인 103개 재정수반요인(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9,641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로, 국가가 재정주체인 수입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5조 3,473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주체인 수입법률의 65개 재정수반요인(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005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적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주체인 수입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610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표 9] 2025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단위: 개, 억원)

재정주체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국가	103 (44)	198,207 (767,363)	39,641 (153,473)
지방자치단체	65 (22)	-40,023 (43,051)	-8,005 (8,610)
합 계	152 ¹⁾ (62) ²⁾	158,184 (810,414)	31,637 (162,083)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16개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4개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5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5년 개정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교육세율 인상 등 세율이나 요율을 인상한 재정수반요인이 수입의 증가세를 주로 견인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가 증가세를 제약
 - 연평균 금액 기준 상위 10개 재정수반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교육세율 인상 등 4개의 재정수반요인이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자녀 수에 따른 공제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등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을 포함한 6개의 재정수반요인은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표 10] 2025년 개정 수입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523,927	104,785
2	법인세율 인상	184,820	36,964
3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등	-153,137	-30,627
4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구조 개편 등	-109,439	-21,888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6,397	-15,279
6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75,454	-15,091
7	교육세율 인상	65,513	13,103
8	담배 범위에 합성니코틴 제품 포함	61,878	12,376
9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54,344	-10,869
10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7,545	-5,509

주: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중 금액(절댓값) 기준 상위 10개 요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세율 등의 인상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결혼·출산·자녀양육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교육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5조 8,548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국민연금법」 개정(2025.3.20. 의결), 「법인세법」 개정(2025.12.2. 의결), 「교육세법」 개정(2025.12.2. 의결), 「지방세법」 개정(2025.12.30. 의결)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이후 13%를 적용
 - (법인세법) 법인세율을 기존 9~24%에서 10~25%로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p씩 인상
 - ※ (지방세법)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기존 0.9~2.4%에서 1.0~2.5%로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0.1%p씩 인상
 - (교육세법)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이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0.5%p 인상
 - (결혼·출산·자녀양육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적용,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조 1,873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소득세법」 개정(2025.12.2.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12.2. 의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5.12.30. 의결) 등
 - (소득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에서 휴직 이후 시기별로 월 160~250만원으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0~300만원에서 자녀 수에 비례(1인당 25~50만원)하여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말까지 3년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까지 3년 연장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준 완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5,569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2.27. 의결 및 2025.12.2. 의결)
- (조세특례제한법, 2025.2.27. 의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 의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우대받을 수 있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적용기준 완화(총수입 8천만원 → 1억 4백만원)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5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법률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수입법률 18건 중 조세수입과 관련된 법률은 16건(국세수입 14건, 지방세수입 2건), 조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률은 2건으로 나타남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152개 중 조세수입과 관련된 요인은 150개(국세수입 101개, 지방세수입 49개), 조세외수입과 관련된 요인은 2개로 나타남
 - 국세수입과 관련된 요인은 「조세특례제한법」 79개, 「소득세법」 6개 등
 - 지방세수입과 관련된 요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44개, 「지방세법」 5개 등
 - 조세외수입 관련된 요인은 「국민연금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각각 1개

[표 11] 2025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법률별

(단위: 건, 개)

법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추계가능	전체	추계가능
조세 수입	국세 수입	국세기본법	1	1	4	2
		소득세법	1	1	15	6
		법인세법	2	1	1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	6	1
		부가가치세법	2	1	3	2
		개별소비세법	1	1	2	1
		관세법	2	2	8	5
		교육세법	1	1	1	1
		종합부동산세법	1	1	2	1
		조세특례제한법	2	2	107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1	6	1
	담배사업법	1	1	1	1	
	지방세 수입	지방세법	1	1	13	5
		지방세특례제한법	1	1	52	44
소계		19	16	230	150	
조세외수입		국민연금법	1	1	1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1	1	1
		기타 ¹⁾	33	0	46	0
		소계	35	2	48	2
합 계			54	18	278	152

주: 1) 기타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추계가 불가능한 「자동차관리법」, 「수
산자원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재정수입의 증가는
주로 「국민연금법」,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에서, 재정수입의 감소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발생

[표 12] 2025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

(단위: 개, 억원)

법률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조세 수입	국세 수입	소득세법	6	-8,247	-1,649
		법인세법	1	184,820	36,964
		조세특례제한법	79 (20)	-637,313 (-29,879)	-127,463 (-5,976)
		교육세법	1	65,513	13,103
		담배사업법	1	61,878	12,37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1,685	337
		개별소비세법	1	-4,297	-859
		관세법	5	-1,933	-387
		기타 ¹⁾	6	1,288	258
	지방세 수입	지방세법	5	14,443	2,889
		지방세특례제한법	44 (13)	-44,867 (-71)	-8,973 (-14)
	소계		150 (60)	-367,031 (285,199)	-73,406 (57,040)
조세외 수입	국민연금법		1	523,927	104,78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1,288	258
	소계		2	525,215	105,043
합 계			152 (62)	158,184 (810,414)	31,637 (162,083)

주: 1) 조세수입 기타에는 합계금액 200억원 이하의 부가가치세법 등 4개 수입법률을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52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조세수입

(가) 소득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소득세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배당가산을 인상,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적용,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 6건²³⁾
 - 배당가산을 조정: 법인세율 인상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인상
 -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이중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배당소득 × 배당가산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
 - ※ 배당가산율 = 법인세 최저세율/(1-법인세 최저세율)
 - 202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이 1%p 인상(9% → 10%)됨에 따라 배당가산율도 1%p 인상
 - ※ 배당가산율: 10% → 11%
 -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도입
 -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취학전 아동 어린 이집·학원·체육시설 등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예능학원·체육시설 추가
 -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비례하여 확대
 -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공제한도: 월 2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23) 이하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일을 표시하지 않고,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일을 표시

□ (재정소요점검 결과) 「소득세법」 개정(2025.12.2. 의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49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배당가산을 조정: 연평균 750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연평균 596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연평균 274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표 13] 2025년 개정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소득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5.12.2.)	배당가산을 조정	-3,749	-750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2,979	-596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1,372	-274
	기타 ¹⁾	-147	-29
합 계		-8,247	-1,649

주: 1)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법인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법인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법인세율 인상 1건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 1%p 인상
 - 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2~200억원/200~3,000억원/3,000억원 초과, %):
9/19/21/24 → 10/20/22/25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9~24%에서 20~25%로 인상

- (재정소요점검 결과) 「법인세법」 개정(2025.12.2. 의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6,964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표 14] 2025년 개정 「법인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법인세법」 (정부, 2025.12.2.)	법인세율 인상	184,820	36,9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부가가치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부가가치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등 2건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율 상향
 - 가산세율: 3% → 4%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 (재정소요점검 결과) 「부가가치세법」 개정(2025.12.2. 의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78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연평균 153억원 조세수입 증가 예상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연평균 25억원 조세수입 증가 예상

[표 15] 2025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위원장, 2025.12.2.)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763	15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	127	25
합 계		890	1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조세특례제한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자녀 수에 따른 공제한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구조 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축소 등 79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자녀 수에 따른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확대
 -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300만원 +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250만원 +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구조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고용기간에 비례한 공제액 인상구조를 도입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고용증가 1인당 공제액(만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반	중소	3년간 850~950	1년차: 400~700 2년차: 900~1,200 3년차: 1,000~1,300
	중견	3년간 450	1년차: 300 2년차: 500 3년차: 500
청년 등	중소	3년간 1,450~1,550	1년차: 700~1,000 2년차: 1,600~1,900 3년차: 1,700~2,000
	중견	3년간 800	1년차: 500 2년차: 900 3년차: 900
	대기업	2년간 400	1년차: 300 2년차: 500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감면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까지 3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까지 3년 연장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매·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신설

- 공제한도: 매출액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가액

※ 공제한도를 초과한 미공제금액에 대해 1년 이월공제 허용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축소: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소득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저율과세 대상에서 제외

- 비과세 대상: 농림어업인 조합원 및 준조합원 → 농림어업인 조합원 및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준조합원

- 적용기한: 비과세 2025.12.31., 5% 저율과세 2026.12.31. →
비과세 2028.12.31., 5% 저율과세 2029.12.31.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 5% 저율과세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적용되는 우대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말에서 2029년말(반도체 기술은 2031년말)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27.12.31. → 2029.12.31.

※ 단, 반도체 기술은 2031.12.31.로 4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우대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말에서 2029년말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27.12.31. → 2029.12.31.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2.27. 및 2025.12.2. 의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2조 7,463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단,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976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평균 3조 627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구조 개편: 연평균 2조 1,888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1조 5,279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1조 5,091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연평균 1조 869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축소: 연평균 5,195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5,509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표 16] 2025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위원장, 2025.12.2.)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153,137	-30,627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구조 개편	-109,439	-21,88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6,397	-15,279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75,434	-15,091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54,344	-10,869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축소	-25,974	-5,195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특례대상 축소	-18,211	-3,642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17,568	-3,514
	전기 등을 이용한 시내버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1,560	-2,312
	기타 ¹⁾	-41,592	-8,314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위원장, 2025.2.27.)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7,545	-5,509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5,991	-3,198
	기타 ²⁾	-10,120	-2,024
합 계		-637,313 (-29,879)	-127,463 (-5,976)

주: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2)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추가 등

1. ()는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교육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교육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교육세율 인상 1건
 - 교육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 0.5%p 인상
 -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율: 수익금액에 관계없이 0.5% →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교육세법」 개정(2025.12.2. 의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3,103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표 17] 2025년 개정 「교육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교육세법」 (정부, 2025.12.2.)	교육세율 인상	65,513	13,1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담배사업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담배사업법」의 재정수반요인은 담배 범위에 합성니코틴 제품 추가 1건
 - 담배 범위에 합성니코틴 제품 추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국세, 지방세 및 조세외수입 등이 부과
 - 합성니코틴 담배가 국세(개별소비세 담배분,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조세외수입(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수입증가 예상

※ 단,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과세에 따른 세부담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 대하여 2026년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

구분			세율(니코틴용액 1ml 기준)	
			법정세율	감면('26.4.~'28.4.)
조세 수입	국세	개별소비세	370원	185원
		부가가치세 (제세부담금의 10%)	180원	90원
	지방세	담배소비세	628원	314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3.99%)	276.3원	138.15원
조세외 수입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262.5원
	폐기물부담금		카트리지당 1.22원	카트리지당 1.22원

□ (재정소요점검 결과) 「담배사업법」 개정(2025.12.2. 의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2,376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단, 이는 담배 범위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추가한 데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만을 포함한 수치

-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해당 제품 과세의 한시적 감면²⁴⁾을 고려하면 수입은 연평균 1조 104억원 증가 예상

※ 「담배사업법」에 따른 수입 증가효과: 연평균 12,376억원

※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의 한시적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효과: 연평균 -2,272억원²⁵⁾

24) 한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026년 4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5년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5)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 개별소비세법’ 및 ‘(카) 지방세법’ 참조

[표 18] 2025년 개정 「담배사업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담배사업법」 (기획재정위원장, 2025.12.2.)	담배 범위에 합성니코틴 제품 추가 ¹⁾	61,878	12,376

주: 1) 동 추계는 담배 범위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추가한 데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만을 포함한 수치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해당 제품 과세의 한시적 감면을 고려하면 조세수입은 2026~2030년간 연평균 1조 104억원 증가 예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서류 추가 1건

○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서류 추가: 정상가격 조정시 제출 자료에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추가

- 정상가격 조정시 제출자료: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입증서류 →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등 추가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12.2. 의결)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37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표 19] 2025년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부, 2025.12.2.)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서류 추가	1,685	3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 개별소비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개별소비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의 한시적 감면 적용 1건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감면: 2025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율 감면
 - 감면율: 50%
 - ※ 합성니코틴 용액 1ml 기준 개별소비세율: 370원 → 185원
 - 적용기한: 2026.4.24. ~ 2028.4.23.
- (재정소요점검 결과) 「개별소비세법」(2025.12.2. 의결)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59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단, 이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한시적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만을 포함한 수치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담배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포함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해당 제품 과세의 지방세 감면까지 고려하면 수입은 연평균 1조 104억원 증가 예상

[표 20] 2025년 개정 「개별소비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5.12.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 세율 감면 ¹⁾	-4,297	-859

주: 1) 동 추계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의 한시적 감면에 따른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효과로, 「담배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담배의 과세대상 포함,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담배의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감면을 고려하면 수입은 2026~2030년간 연평균 1조 1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 관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관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항공기부분품 과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기간 폐지 등 5건
- 항공기부분품 과세감면과 관련하여 2025년 「관세법」은 두 차례 개정:
 - (2025년 2월 개정) 항공기부분품 과세감면의 단계적 축소계획을 1년 유예
 - ※ 감면율(%): (개정 전) '24년 100, '25년 80, '26년 60, '27년 40, '28년 20
→ (개정 후) '25년 100, '26년 80, '27년 60, '28년 40, '29년 20
 - (2025년 12월 개정) 항공기부분품 과세 감면율의 단계적 축소계획을 폐지하고, 2028년까지 과세면제 적용
 - ※ 감면율(%): (개정 전) '25년 100, '26년 80, '27년 60, '28년 40, '29년 20
→ (개정 후) '25~'28년 100
- (재정소요점검 결과) 「관세법」(2025.2.27. 의결 및 2025.12.2. 의결)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87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항공기부분품 과세면제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적용기한 연장 등:
 - ('25.2. 개정) 연평균 147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25.12. 개정) 연평균 240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표 21] 2025년 개정 「관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관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5.2.27.)	항공기부분품 과세감면의 단계적 축소계획 1년 유예	-734	-147
「관세법」 (기획재정위원장, 2025.12.2.)	항공기부분품 과세감면의 단계적 축소 계획 폐지 등	-1,170	-234
	기타 ¹⁾	-29	-6
합 계		-1,933	-387

주: 1) 희귀병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의약품 관세 면제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차) 기타 국세 관련 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범위 확대 등 4건
 -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영리법인이 유산을 소유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
 - 납부지연가산세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에 독촉장 송달비용을 추가
- (재정소요점검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 의결)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8억원, 「국세기본법」(2025.12.2. 의결)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0억원, 「종합부동산세법」(2025.12.2. 의결)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연평균 58억원 조세수입 증가 예상
 - 납부지연가산세 범위 확대 및 산정방식 변경: 연평균 20억원 조세수입 증가 예상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대상 추가: 연평균 2억원 조세수입 증가 예상

[표 22] 2025년 개정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 2025.12.2.)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288	58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2025.12.2.)	납부지연가산세 범위 확대	90	18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변경	10	2
「종합부동산세법」 (정부, 2025.12.2.)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대상 추가	10	2
합 계		398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카) 지방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지방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감면 등 5건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이 납세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 인상
 - 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2~200억원/200~3,000억원/3,000억원 초과, %): 0.9/1.9/2.1/2.4 → 1.0/2.0/2.2/2.5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9~2.4%에서 2.0~2.5%로 인상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
 - 과세대상: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
 - 세율: 톤당 6천원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감면: 2025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담배소비세율 감면

- 감면율: 50%

- ※ 합성니코틴 용액 1ml 기준 담배소비세율: 628원 → 314원

- 적용기한: 2026.4.24. ~ 2028.4.23.

□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세법」(2025.12.30. 의결) 개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889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연평균 3,696억원 조세수입 증가 예상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 연평균 463억원 조세수입 증가 예상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감면: 연평균 1,413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단, 이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의 한시적 감면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수 감소효과만을 포함한 수치

-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담배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포함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해당 제품 과세의 개별소비세율 감면까지 고려하면 수입은 연평균 1조 104억원 증가 예상

[표 23] 2025년 개정 「지방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지방세법」 (행정안전위원장, 2025.12.30.)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18,482	3,696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	2,313	463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감면 ¹⁾	-7,065	-1,413
	기타 ²⁾	713	143
합 계		14,443	2,889

주: 1) 동 추계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의 한시적 감면에 따른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효과로, 「담배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담배의 과세대상 포함,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담배의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감면을 고려하면 수입은 2026~2030년간 연평균 1조 1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세율 인상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타) 지방세특례제한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44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까지 3년 연장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단지의 개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

- 감면율: 취득세 35%, 재산세 35%(비수도권 지역은 60%) →
(수도권) 취득·재산세 15%, (비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15%,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50%, 재산세 60%
 - ※ 산업단지 등 조성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보유한 연도에만 감면되나, 단지 조성 후 분양·임대목적이거나 직접 사용하려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된 후 5년간 감면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말까지 3년 연장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까지 3년 연장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까지 3년 연장
-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에서의 과세특례 신설
 - 특례대상: 고배당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 ※ 고배당기업: 직전연도보다 배당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주식상장법인 중
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 배당성향이 25% 이상으로 배당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인 기업
 - 특례내용: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 적용기한: 2028.12.31.
-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까지 3년 연장

□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5.12.30. 의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973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4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2,879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연평균 1,703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805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791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558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연평균 351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342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표 24] 2025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위원장, 2025.12.30.)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4,397	-2,879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8,516	-1,703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4,025	-805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954	-791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2,791	-558
	고배당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1,757	-351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709	-342
	기타 ¹⁾	-7,719	-1,544
합 계		-44,867 (-71)	-8,973 (-14)

주: 1) 철도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1. ()는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조세외수입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국민연금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도입 등 2건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율(%): ('26년) 9.5, ('27년) 10, ('28년) 10.5, ('29년) 11, ('30년) 11.5, ('31년) 12, ('32년) 12.5, ('33년 이후) 13
 -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도입²⁶⁾: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민연금법」(2025.3.20. 의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5.2.27. 의결)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조 5,043억원의 조세외수입 증가 예상

[표 25] 2025년 개정 조세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국민연금법」 (보건복지위원장, 2025.3.20.)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523,927	104,78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2.27.)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도입	1,288	258
합 계		525,215	105,0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6)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은 2024년 개정(법률 제20622호, 2024.12.31. 공포)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가 2025년 3월 25일부터 다시 도입됨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5년 가결된 재정수반요인의 수입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추계가 가능한 조세수입 관련 재정수반요인 150개는 과세체제로 구분한 세부유형별로 세액공제·감면 112개, 과세대상 17개, 과세표준 8개, 세율 7개, 기타 6개 등으로 나타남
- 추계가 가능한 조세외수입 관련 재정수반요인 2개는 세부유형별로 적용대상 1개, 요율 1개로 나타남

[표 26] 2025년 개정 수입법률 현황: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단위: 건, 개)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추계가능	전체	추계가능
조세수입	과세대상	9	7	32	17
	과세표준	4	2	12	8
	세율	6	5	10	7
	세액공제·감면	7	6	149	112
	기타	15	4	27	6
	소계	19 ¹⁾	16 ¹⁾	230	150
조세외수입	적용대상	25	1	37	1
	요율	2	1	2	1
	감면	2	0	2	0
	기타	6	0	7	0
	소계	35	2	48	2
합 계		54	18	278	152

주: 1) 조세수입의 법률이 과세체제별로 중복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개별 유형별로 분류된 법률 건수와 합계 건수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ox2]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구분

- (조세수입) 조세수입은 과세체계상 어느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재정수반요인 유형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감면, 기타 등으로 구분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비과세 요건 변동, 과세 신고대상 요건 변동 등을 포함
 -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의 소득 등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소득공제·감면 요건 변동, 법인의 익금 및 손금산입 변동 등을 포함
 - 세율: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한 적용세율 변경, 세율의 인상·인하, 중과세율의 적용 및 적용배제 등을 포함
 - 세액공제·감면: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세액공제·감면 요건 변동, 공제·감면을 변동, 공제·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
 -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
 - 기타: 기타 납부기한 등 세무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이나, 과세체계상 구분이 어려운 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등을 포함
- (조세외수입) 조세외수입은 재정수반요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 적용대상, 요율, 감면, 기타 등으로 구분
 - 적용대상: 부담금 및 과태료, 가산금, 벌칙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축소하는 등의 개정사항 포함
 - 요율: 부담금 등의 한도나 요율 등을 상향·하향하는 등의 개정사항 포함
 -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대상 및 요건, 감면을 등에 대한 개정사항 포함
 -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 등의 근거조항 신설 및 정비 등을 포함

- 조세수입의 경우 세부유형별 연평균 세수효과(절댓값)는 세액공제·감면(8조 649억원), 세율(3조 6,541억원), 과세표준(3조 3,474억원) 순
- 조세외수입의 경우 세부유형별 연평균 세수효과(절댓값)는 요율(10조 4,785억원), 적용대상(258억원) 순

[표 27] 2025년 개정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단위: 개, 억원)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조세수입	과세대상	17 (12)	18,314 (72,803)	3,663 (14,561)
	과세표준	8 (4)	-167,371 (-11,846)	-33,474 (-2,369)
	세율	7 (6)	182,706 (258,160)	36,541 (51,632)
	세액공제·감면	112 (32)	-403,245 (-36,483)	-80,649 (-7,297)
	기타	6	2,565	513
	소계	150 (60)	-367,031 (285,199)	-73,406 (57,040)
조세외 수입	적용대상	1	1,288	258
	요율	1	523,927	104,785
	소계	2	525,215	105,043
합 계		152 (62)	158,184 (810,414)	31,637 (162,083)

주: 1. ()는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조세수입

(가) 과세대상

□ (유형 개요) 과세대상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의 조정 등을 통한 과세대상의 확대 및 축소가 있음

- 2025년 가결된 과세대상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담배 범위에 합성니코틴 제품 추가(이상 세수증가 요인),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축소,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특례대상 축소(이상 세수감소 요인)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의 과세대상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663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4,561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표 28] 2025년 개정 과세대상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담배 범위에 합성니코틴 제품 추가	61,878	12,376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축소	-25,974	-5,195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특례대상 축소	-18,211	-3,642
기타 ¹⁾	621	124
합 계	18,314 (72,803)	3,663 (14,561)

주: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 등

1. ()는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과세표준

□ (유형 개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소득공제·감면의 감면요건 및 감면율 조정, 법인소득 산정시 영향을 미치는 익금·손금의 조정, 이월결손금 조정 등이 있음

- 2025년 가결된 과세표준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의 과세표준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3,474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369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표 29] 2025년 개정 과세표준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153,137	-30,62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6,081	-1,216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	-3,000	-6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2,640	-528
기타 ¹⁾	-2,513	-503
합 계	-167,371 (-11,846)	-33,474 (-2,369)

주: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1. ()는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서울

□ (유형 개요) 서울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한 적용세율 변경, 서울의 인상 및 인하, 영세율 적용, 서울 계산 방식 변경 등이 있음

○ 2025년 가결된 서울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법인세율 인상, 교육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서울 인상(이상 세수증가 요인),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서울 경감(이상 세수감소 요인)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의 서울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6,541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조 1,632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표 30] 2025년 개정 서울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법인세율 인상	184,820	36,964
교육세율 인상	65,513	13,103
법인지방소득세 서울 인상	18,482	3,696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서울 인상	707	141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등	-75,454	-15,09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경감	-7,065	-1,413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경감	-4,297	-859
합 계	182,706 (258,160)	36,541 (51,632)

주: 1. ()는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세액공제·감면

□ (유형 개요) 세액공제·감면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용요건 조정,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인상 및 인하, 공제한도 변경 등이 있음

- 2025년 가결된 세액공제·감면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구조 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전기 등을 이용한 시내버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의 과세표준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조 649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 단,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297억원의 조세수입 감소 예상

[표 31] 2025년 개정 세액공제·감면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구조 개편	-109,439	-21,88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6,397	-15,279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54,344	-10,869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7,545	-5,509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17,568	-3,5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5,991	-3,198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4,397	-2,879
전기 등을 이용한 시내버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1,560	-2,312
기타 ¹⁾	-76,004	-15,201
합 계	-403,245 (-36,483)	-80,649 (-7,297)

주: 1)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등

1. ()는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기타 조세수입 유형

□ (유형 개요) 기타 국세수입 유형의 재정수반요인은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관련 행정절차의 변화와 기한 조정, 가산세율 및 가산세 납세기한 조정 등이 있음

- 2025년 가결된 기타 유형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범위 확대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수입의 기타 유형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13억원의 조세수입 증가 예상

[표 32] 2025년 개정 기타 조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1,685	337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763	15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범위 확대	127	25
기타 ¹⁾	-9	-2
합 계	2,565	513

주: 1)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편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조세외수입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5년 가결된 조세외수입의 유형관련 재정수반요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부담금 등의 한도나 요율 등을 상향·하향하는 요율 관련 재정수반요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 부담금 및 과태료, 가산금, 벌칙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축소하는 적용대상 관련 재정수반요인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도입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외수입 관련 유형별 수입증가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33] 2025년 개정 조세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유형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요율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523,927	104,785
적용대상	영화상영권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도입	1,288	258
합 계		525,215	105,0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2025년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 2025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지출법률은 176건(재정수반요인은 493개)으로서 이 중 추계가 가능한 101건 법률(재정수반요인 170개)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²⁷⁾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동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른 지출 변동 규모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따른 지출효과를 포함
 - 유효기간 연장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의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67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이하에서는 추계가 가능한 101건 법률의 170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재정주체별로 구분하여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서술
- (위원회별)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금액은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순
 - 다만, 유효기간 연장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순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의 24개 재정수반요인(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 신규 도입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1,41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27) 이하 연평균 값은 법률 제·개정에 따라 2026~2030년까지 예상되는 지출 변동의 총액을 5년으로 나눈 값으로, 예를 들어, 법률이 2027년 이후 시행되거나 법률의 효력이 2029년 이전에 종료되어 지출 변동이 1~4년간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 유효기간 연장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72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의 30개 재정수반요인(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 의사 양성 지원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41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의 12개 재정수반요인(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한우 도축·출하장려금 지급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252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의 28개 재정수반요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장애인 기업활동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 지원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6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그 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으로 연평균 359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으로 연평균 296억원의 지출 증가 등이 예상

[표 34]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단위: 개, 억원)

위원회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국회운영위원회	1	284	57
법제사법위원회	6	119	24
정무위원회	1	1,295	25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
교육위원회	5	52	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3	1,482	296
외교통일위원회	1	2	0
국방위원회	1	5	1
행정안전위원회	19	1,793	35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	573	1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	6,261	1,25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	3,802	760
보건복지위원회	30	12,076	2,4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	1,174	235
국토교통위원회	24 (23)	57,080 (8,629)	11,416 (1,726)
정보위원회	-	-	-
성평등가족위원회	3	161	3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8	71	14
기후위기특별위원회	1	62	1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2	534	107
합 계	170 (169)	86,828 (38,377)	17,366 (7,675)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70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는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가가 재정주체인 지출법률의 168개 재정수반요인(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 국민연금 노령연금 금액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6,44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 효과로 국가가 재정주체인 지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75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주체인 지출법률의 10개 재정수반요인(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지역 의사 양성 지원 등)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2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35]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단위: 개, 억원)

재정주체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¹⁾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국가	168 (167)	82,199 (33,748)	16,440 (6,750)
지방자치단체	10	4,629	926
합 계	170 ¹⁾ (169)	86,828 (38,377)	17,366 (7,675)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재정수반요인 8개 포함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70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는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국민연금법」이 두 차례 개정되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및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5년(2026~2030년)간 연평균 1,61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2025.3.20. 의결, 2026.1.1. 시행)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²⁸⁾하여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완화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2025.11.27. 의결, 2026.6.17. 시행예정) 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기준을 완화²⁹⁾하여, 고령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제고

[표 36]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주요내용(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2025.3.20.)	2,610	52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2025.11.27.)	5,445	1,089
합 계	8,055	1,6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8) 법 개정 전에는 과거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납부재개' 요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29)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해당 수급권자를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

□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5.12.2. 의결, 2026.2.24. 시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5.10.26. 의결, 2026.5.12. 시행)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48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학비 등 지원,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지원,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별 의료 불균형 완화 도모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을 법제화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

[표 37]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5.12.2.)	2,107	42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10.26.)	319	64
합 계	2,425	4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2025.11.13. 의결, 2026.12.3. 시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2.27. 의결, 2025.9.26. 시행)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2025.12.30. 의결, 2026.1.22. 시행)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1,54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국토위성 도입을 통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뒷받침하고, 디지털 트윈국토 확산을 통해 국가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등 원전의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및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제고

[표 38]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관련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025.11.13.)	3,774	75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2.27.)	2,970	59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12.30.)	1,000	200
합 계	7,744	1,5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5.5.1. 의결, 2025.5.20. 시행)으로 동 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³⁰⁾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 등에 향후 5년간 연평균 9,69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표 3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5.5.1.)	48,451	9,6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5년 가결된 지출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지출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정부의 기능에 따라 16대 분야³¹⁾로 구분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야 구분에 근거하여 지출분야별 재정소요를 점검
- 추계가 가능한 지출법률 101건을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건, 보건 15건, 사회복지 14건 순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170개는 지출분야별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개, 사회복지 21개, 보건 20개 순

30) 유효기간: 2025.5.31. → 2027.5.31.

31) 다만, 16대 지출분야에는 '예비비'도 별도 분야로 포함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예비비'를 제외

[표 40]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분야별

(단위: 건, 개)

지출분야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추계가능	전체	추계가능
일반·지방행정	12	7	24	15
공공질서 및 안전	15	9	44	10
통일·외교	1	1	1	1
국방	7	1	12	1
교육	13	3	51	5
문화 및 관광	6	6	11	11
환경	6	6	6	6
사회복지	22	14	53	21
보건	15	15	25	20
농림수산	9	5	24	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7	16	131	28
교통 및 물류	14	8	39	17
통신	1	1	3	1
국토 및 지역개발	13	6	45	15
과학기술	5	3	24	9
합 계	176	101	493	1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 분야 순

[표 41]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단위: 개, 억원)

지출분야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일반·지방행정	15	1,478	296
공공질서 및 안전	10	955	191
통일·외교	1	2	0
국방	1	5	1
교육	5	52	10
문화 및 관광	11	724	145
환경	6	1,165	233
사회복지	21 (20)	58,878 (10,427)	11,776 (2,085)
보건	20	3,664	733
농림수산	10	4,654	93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	3,802	760
교통 및 물류	17	2,929	586
통신	1	1,000	200
국토 및 지역개발	15	7,217	1,443
과학기술	9	302	60
합 계	170 (169)	86,828 (38,377)	17,366 (7,675)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70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는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하에서는 2026~2030년 연평균 지출변동액이 700억원을 초과하는 지출분야인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재정수반요인을 분석

가.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5.5.1. 의결, 2025.5.20. 시행)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69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민연금법」 개정(2025.11.27. 의결, 2026.6.17. 시행)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연평균 1,08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민연금법」 개정(2025.3.20. 의결, 2026.1.1. 시행)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52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5.8.27. 의결, 2026.3.17. 시행)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연평균 25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1,77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2] 2025년 개정 사회복지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5.5.1.)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48,451	9,690
「국민연금법」(2025.11.27.)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 완화	5,445	1,089
「국민연금법」(2025.3.20.)	국민연금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2,610	5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25.8.27.)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1,295	259
기타(10개 법률, 17개 재정수반요인)		1,077	215
합 계		58,878	11,7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 도입,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2025.11.13. 의결, 2026.12.3. 시행)으로 국토위성 신규 도입, 디지털 트윈국토 확산 등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5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5.8.4. 의결, 2026.8.27. 시행)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에 따라 연평균 61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토위성의 신규 도입,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443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3] 2025년 개정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25.11.13.)	국토위성 신규 도입 등	3,774	75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5.8.4.)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지원 등	3,086	617
기타(4개 법률, 4개 재정수반요인)		359	72
합 계		7,217	1,4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농림수산 분야

- 농림수산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한우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5.8.4. 의결, 2026.8.27. 시행예정)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해 농산물지원사업 실시, 광역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4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5.7.3. 의결, 2026.7.23. 시행예정)으로 한우 도축과 출하에 따른 장려금 지원에 따라 연평균 16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농림수산 분야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한우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31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4] 2025년 제·개정 농림수산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5.8.4.)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등	3,742	748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8.4.)	한우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등	800	160
기타(3개 법률, 4개 재정수반요인)		113	23
합 계		4,654	9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장애인 기업활동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 지원 등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2.27. 의결, 2025.9.29. 시행)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등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9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개정(2025.11.13. 의결, 2026.6.3. 시행)으로 장애인 기업활동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 지원에 연평균 3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장애인 기업활동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 지원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6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5] 2025년 제·개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2.2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2,970	594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2025.11.13.)	장애인 기업활동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 지원	162	32
기타(14개 법률, 21개 재정수반요인)		671	134
합 계		3,802	7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보건 분야

□ 보건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지역의사 양성 지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등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5.12.2. 의결, 2026.2.24. 시행)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학비 등 지원,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 직무교육, 경력 개발 등 지원,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2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5.10.26. 의결, 2026.5.12. 시행)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을 법제화함에 따라 연평균 64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

□ 보건 분야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역의사 양성 지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33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6] 2025년 제·개정 보건 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12.2.)	지역의사 양성 지원 등	2,107	42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10.26.)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319	64
기타(13개 법률, 16개 재정수반요인)		1,238	248
합 계		3,664	7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 2025년 가결된 재정수반요인의 지출성격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인 ‘재량지출’로 구분
 - 정부는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포함³²⁾
 - 본 보고서에서 의무지출 사업은 정부의 2026년 예산 기준 사업과 동일하게 분류
- 추계가 가능한 지출법률 101건을 지출성격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이 2건(2.0%), 재량지출이 99건(98.0%)을 차지

32)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 170개는 지출성격별로 의무지출이 2개(1.2%), 재량지출이 168개(98.8%)로 나타남

[표 47]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현황: 지출성격별

(단위: 건, 개, %)

지출성격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¹⁾	추계가가능	전체	추계가가능
의무지출 (구성비)	9 (5.1)	2 (2.0)	12 (2.4)	2 (1.2)
재량지출 (구성비)	169 (96.0)	99 (98.0)	481 (97.6)	168 (98.8)
합 계	176 ¹⁾ (100.0) ²⁾	101 (100.0)	493 (100.0)	170 (100.0)

주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수반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는 법률 2건 포함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성비의 합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수반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는 법률로 인해 100.0%를 초과하나 합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100.0%로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지출성격별로 살펴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의무지출은 연평균 1,286억원, 재량지출은 연평균 1조 6,080억원 증가 예상
 - 유효기간 연장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의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재량지출은 6,389억원 증가 예상

[표 48] 2025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성격별

(단위: 개, 억원)

지출성격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 계	연평균
의무지출	2	6,430	1,286
재량지출	168 (167)	80,398 (31,947)	16,080 (6,389)
합 계	170 (169)	86,828 (38,377)	17,366 (7,675)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70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는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제도개편에 따른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의무지출

- 의무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 완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연장 등
-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 완화) 「국민연금법」 개정(2025.11.27. 의결, 2026.6.17. 시행)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전 기준에 따른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감액 대상자의 향후 연금급여 지급 예상액을 역산하여 산출한 결과, 연평균 1,089억원의 의무지출 증가 예상
-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연장)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25.10.26. 의결, 2025.11.11. 시행)으로 과거 하천 국유화 원칙과 보상 규정 미비로 인해 정당한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

- 보상 지급 대상 토지 면적에 보상비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연평균 197억원의 의무지출 증가 예상

[표 49] 2025년 개정 의무지출 재정수반요인의 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국민연금법」(2025.11.27.)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 완화	5,445	1,08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5.10.26.)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 연장	985	197
합 계		6,430	1,2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재량지출

- 재량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 신규 도입,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5.5.1. 의결, 2025.5.20. 시행)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예상 전세사기피해주택 수에 매입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연평균 9,690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 도입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2025.11.13. 의결, 2026.12.3. 시행예정)으로 국토위성 신규 개발·도입, 디지털 트윈국토 확산 등에 따른 비용 발생

-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및 연차별 재정투입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 연평균 755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5.8.4. 의결, 2026.8.27. 시행예정)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및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 연평균 748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5.8.4. 의결, 2026.8.27. 시행예정)으로 국가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따른 기본설계비 및 공원조성비와 운영관리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 연평균 617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2025.3.20. 의결, 2026.1.1. 시행)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
 - 법률 개정으로 예상되는 총 재정소요에서 개정 전 제도가 유지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한 결과, 연평균 522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2.27. 의결, 2025.9.29. 시행)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등에 따른 비용 발생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계획 및 연차별 재정투입계획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비용 등을 추계한 결과, 연평균 594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5.8.27. 의결, 2026.3.17. 시행)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배우자 수에 생계지원금 월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연평균 259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 (보도구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도로법」 개정(2025.11.13. 의결, 2026.3.1.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보도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 국토교통부의 재정투입계획을 참고하여 일반국도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필요 구간에 설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연평균 233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표 50] 2025년 제·개정 재량지출 재정수반요인의 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합계	연평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5.5.1.)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48,451	9,69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025.11.13.)	국토위성 신규 도입 등	3,774	7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5.8.4.)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등	3,742	7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5.8.4.)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	3,086	617
「국민연금법」(2025.3.20.)	국민연금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2,610	52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2.2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2,970	5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25.8.27.)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1,295	259
「도로법」(2025.11.13.)	보도구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1,164	233
기타(91개 법률, 145개 재정수반요인)		13,306	2,661
합 계		80,398	16,0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 결 론

- 2025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와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 중 추계가 가능한 118건 법률의 322개 재정수반요인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
 - 추계가능 수입법률은 18건, 152개 재정수반요인
 - 추계가능 지출법률은 101건, 170개 재정수반요인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편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 2,083억원의 수입 증가와 연평균 7,67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수입) 국민연금 보험료율·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 등 재정수반요인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6조 2,083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지출)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 재정수반요인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67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3조 446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9,69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수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 등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조 446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지출)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 등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69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51]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2030년 연평균 재정소요

구분	수입		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3조 1,637억원 증가		1조 7,366억원 증가
제도개편 효과	16조 2,083억원 증가		7,675억원 증가
	조세수입	5조 7,040억원 증가	
	조세외수입	10조 5,043억원 증가 ¹⁾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13조 446억원 감소		9,690억원 증가

주: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효과(연평균 10조 4,785억원) 포함

1.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재정변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예산 편성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세율 및 요율인상 관련 제도개편이 수입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혼·출산·양육,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도 강화되는 추세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교육세율 인상 등 수입기반 확충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수반요인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5조 8,548억원의 수입 증가 예상

- 한편, 결혼·출산·양육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도 강화되는 추세

※ 조세지원 목적별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2026~2030년 연평균):

(결혼·출산·양육) 3조 1,873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조 5,569억원

-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지출법률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전 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특징을 보임
- 재정소요점검은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법의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정소요 발생의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에 따른 추계상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
 -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과 단가가 확정되어 지출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지출법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과 세율이 명문화된 세입법률의 경우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실시 가능
 -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구체적 시행 계획의 미비, 추계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점검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예산 편성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일	2026년 5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SN 3058-2032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